"공동수주 우선구매지원제 도입을"

중기중앙회 지역 회장단, 정부에 촉구

올해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 조달시장에서 영업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달시장 납품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수주 우선구매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20일 담양리조트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지역회장단협의회는 '시급히 반영돼야 할 5대 중소기업정책과제'의 하나로 이같이 밝혔다.

또 협의회는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여건 악화와 관련,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제한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립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출연 등을 정부에 요구할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전용예산을 1조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제품판매 차원에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관련 정부시책이 21개부처 1천541개에 달하나 전담조직은 중기청(차관급)과 중기특위(비상임기구)뿐"이라며 "중기특위와 중기청을 합쳐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경영원활화를 모색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제기금 대출업체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보전사업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보전내용은 어음·수표대출의 경우 1.0%, 단기운영자금대출은 2.0%로 하되 광주시와는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전남도와는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중기 정책과제
- -대형마트 확산 제한
- -전담은행 설립
- -카드 수수료 인하
- -소기업 공제 출연

강영태 본부장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삼성광주전자·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생·실무협의회를 가동중"이라며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막고 합법적인 고용을 확산하기 위해 노사화합의장, 외국인 근로자 위로행사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전남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장춘상)의 기능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최대한 유치, 수행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달 업종·규모별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을 조사하고, 맞춤형 지원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20일 담양 죽녹원을 방문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회원들이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쟁력 위해선 CEO부터 혁신 필요"

여성경제인협 광주·전남지회 '경영 연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김향덕)는 지난 20일 담양리조트에서 '2007년 여성 CEO 경영혁신연수'를 실시했다.

5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여성 CEO의 경영능력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자신부터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경영혁신에 관한 전략적인 연구사례를 분석, 연구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회원들은 소쇄원-식영정-죽녹원-메타세콰이어길-대나무테마파크 등 담양지역 관광명소를 돌며 '남도문화체험'을 했다.

김향덕 지회장은 "남도의 멋과 문화를 체험, 여성기업인으로서 지역사랑의 실천기회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재충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 회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줄인다

내달부터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 대폭 축소

앞으로 신용카드 신상품에 적용되는 각종 할인,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비용이 해당상품의 신용판매 이익 범위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부가서비스를 노린 비우량회원이 급증하거나 늘어난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사의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모범규준이 적용되면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특정상품에 대해 매우 높은 할인율과 포인트 적립률을 적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즉 '출혈'이라 표현할 만큼 강력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지닌 카드 신상품이 나오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모범규준은 3개월 초과 무이자할부 판매행사에 대해서도 수익성 분석을 강화하도록 해 무이자할부 제도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종 선(先)포인트 할인과 관련된 과장광고,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회원의 카드사용 의무는 작게 광고하거나 최대 포인트 적립률만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광고도 통제한다.

모범규준은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의 수익창출, 경영 리스크 증가, 비용통제 등 요인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상품운용전략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부가서비스 비용 증가율이 작년 동기대비 37.5% 증가하는 등 비용이 수익증가율을 넘어서는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모범규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년 복리정기예금 연수익율
5.85%(확정금리)
법조타운 1층(법원 앞) ☎ 062)233-0717
여수지점 ☎ 061)660-0114
순천지점 ☎ 061)724-3399
상업저축은행

쌀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

개인 10ha·법인 50ha로 결정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이 10ha로 결정됐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개선 최종안'을 보고했다.

농림부는 최종안에서 부부가 한해 3천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되면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직불제 신청자가 농업인 개인일 경우 10ha, 영농조합·농업회사 등의 법인일 경우 50ha까지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상한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농지 소재지가 경작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인접 읍·면에 있을 경우에만 실 경작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경작자 본인이 실 경작사실을 증명할 때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종안은 부당신청에 따른 직불제 등록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직불제 집행기간을 지자체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철도공사 친인척 취업자 87%가 특채"

철도공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 취업자 가운데 87.2%가 특별채용으로 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통합신당)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일까지 철도공사에 근무 중인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 취업자는 총 524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63%인 330명은 특별채용을 통해 입사했고 나머지 194명(37%)은 공개채용을 통해 뽑혔다.

전체 친인척 취업자 524명의 친인척은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74.8%인 392명이었으며 퇴직자는 25.2%인 132명이었다.

친인척 취업자들의 직군은 정규직 직원이 265명(50.6%), 계약직 직원이 259명(49.4%)이었다. 정규직 직원 265명 가운데 87.2%인 231명은 특별채용됐고 나머지 34명(12.8%)은 공개채용됐다. 계약직 가운데 특별채용된 직원은 38.2%인 99명이었고 공개채용은 61.8%인 160명이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억울하게 낸 세금 돌려 드립니다

국세심판원 올 상반기 2,816억 환급 결정

올 상반기에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라고 결정된 억울한 세금이 2천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처리한 국세심판청구 규모는 1조4천31억원(2천200건)이며 이중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결정이 내려진 규모는 2천816억원(635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인용결정이 내려진 5천449억원(1천392건)의 51.6%다.

인용결정이 내려진 심판청구의 금액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천9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305억원), 상속증여세(249억원), 종합소득세(111억원), 양도소득세(3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액기준 인용률은 법인세가 심판청구 금액 7천597억원 중 1천905억원이 인용돼 2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상속증여세(17.9%), 부가가치세(15.4%), 양도소득세(9.0%), 종합소득세(6.8%) 등의 순이었다. 200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인용된 심판청구 금액은 모두 3조5천714억원이었다.

연도별 인용 금액은 2000년 2천364억원, 2001년 6천54억원, 2002년 3천127억원, 2003년 4천459억원, 2004년 3천229억원, 2005년 8천216억원, 2006년 5천449억원 등이다. /이종태기자 jtlee@

위험처방 목록 160건 누락

'부작용 약물' 수천건 처방

식약청이 심각한 부작용 우려로 처방을 제한하는 목록을 지정하면서 최소 160여건을 누락해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처방이 매달 1천300건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병용금기 위험처방이 90% 이상 줄었다는 복지부의 주장도 실태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함께 처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병용금기' 처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식약청이 최소 165건의 병용금기 처방 목록을 빠뜨렸으며 그 결과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병용금기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가 불과 3개월 동안 3천931명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종가집 설렁탕
확장이전
종가집 설렁탕 | 예약전화 062)374-0015